

단일대오 나선 민주 '李 체포동의안' 표 단속 주력

이재명 대표

오늘 의총서 대응 방안 논의
구속영장 청구 부당함 강조
비명계 중심 '李 사퇴' 요구도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지도부를 중심으로 오는 27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당내 결속을 다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이 대표가 검찰에 기소될 경우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당 대표 공천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은 당당하게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이라며 "(검찰은) 이 대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장소에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도 쓰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이 배임이라 주장한다. 이익을 더 얻을 수 있었는데 일부만 환수했으니 손해 끼쳤다는 주장"이라며 "도대체 70% 환수하는 게 적정하다는 검찰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21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표결 전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의 불공정·편파적 수사를 강조하며 내부 '표 단속'에 나서는 동시에, '김건희·대장동' 쌍특검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당내 결집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내에선 '부결' 당론보다는 자유투표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다소 신중한 모습이다. 169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론으로 '부결'을 정할 경우 체포동의안 부결은 문제없이 이끌어 낼 수 있다. 하지만 스스로 '방탄 프레임'에 갇혀 더 큰 부담이 따른다는 게 문제다.

의원들은 대체로 자유투표를 해도 부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탈표가 얼마

나 나올지가 초미의 관심사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당 안팎에선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사퇴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당헌 80조에 따라 이 대표가 검찰에 의해 기소될 경우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사법적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당을 끌어들이는 안 된다. 그게 이재명도 살고, 당도 사는 길"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연수 중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날 CBS라디오 방송에 출연, 이 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놓을

것을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지금 국민의힘이 난장판인데 (이 대표) 스스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인다면 신의 한 수다"라며 이 대표에게 공천에서 손을 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 3월 임시회를 열고 정부여당의 나태와 발목잡기로 계류 중인 산적한 민생경제 입법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며 "공분이 끊이지 않는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도 늦지 않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정무위, 납품단가 연동제 '하도급법 개정안' 의결

납품단가연동제 관련 법안인 하도급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자재 가격을 하도급 대금에 연동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하도급 대금을 연동하기 위해 필요한

원재료 품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표준 하도급 대금연동계약서를 마련하는 안도 담겼다.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10% 이내 범위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으로 변동하는 경우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기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정무위 '천공 관사 개입설'... "주술정치" "공상소설" 공방

여야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실 관저 개입 의혹 등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술·무술 정치가 판치는 게 나라가 망하는 징조"라고 공세를 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상소설에나 나올법한 얘기"라고 반박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의 현안질의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천공과 관련 "스스로 나와서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 친분관계를 얘기하고

대통령실 이전이나 관저에 대한 얘기라든가 전반적인 얘기, 의혹이 나오고 있다"며 "이 정도 되면 대통령실이나 국무조정실에서 조사하고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박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첫 업무보고 첫 질의에서 뜬금없는 간신세력, 천공 등 공상소설에 나올듯한 내용을 갖고 질의한다"며 "위원장이 이럴 때 엄중히 지적해줘야 한다"고 항의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김승남 "농어민 지원 정책 맞도록 전력 공급 개선해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사진)은 20일 "농어민 지원 정책의 기능이 훼손된 농사용 전력 공급 제도 개선과 전기료 인상분 지원을 위해 농식품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올해 전력량 요금은 16.1원/kWh 인상돼 산업용은 기존보다 30% 상승한 데 반해, 농사용은 갑종 97%, 을종 47% 상승해 최대 3배 이상 늘

었다. 김 의원은 "농식품부가 나서 정책 조정되는 현행 전기요금체계를 정률로 개선해 인상액이 기존 요금과 비례해 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대폭 상승한 전기료 인상분을 지원하는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윤영덕 '더민초' 제2기 운영위원장 선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 남구갑·사진)이 지난 17일 1박2일 일정으로 경기도 양평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모임'(더민초)에서 제2기 운영위원장에 선출됐다. '더민초'는 민주당의 초선의원들이 소속된 모임으로, 현재 81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며, 이재명 당 대표도 당연직 회원이다.

이날 워크숍에서 윤 의원이 운영위원장에 추천되자, 참석한 의원들은 '윤 의원의 열린 자세와 신중하고 합리적인 성품이

더민초의 운영에 균형적인 운영위원장 역할에 적임'이라며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의 초선의원 대표로서 소속 의원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윤석열 정부의 탄압에 맞서는 강한 민주당을 만들어 내고, 민생경제와 서민들의 삶을 되살려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노인위원회 출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국노인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

"내년까지 암소 14만마리 줄여 한우가격 안정화"

정황근 장관, 국회 업무보고 참여가 출하장려금 20만원 서삼석 "적정 사육 관리 실패"

정부가 한우 도매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세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암소 14만마리를 감축하는 등 수급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또 비료·사료 구매 자금과 난방비를 지원하고, 농업용 전기료 인상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황근 장관은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한우 사육 두수는 352만8000마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더 증가해 358만 마리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이후 도매가격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거세우 1kg 기준 1만9300원에서 올해 1월에는 1만 7672원으로 떨어졌다.

한우 공급 확대와 경기 위축에 따른 수요 감소로 한우 가격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중장기 수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농가 자율 참여를 독려해 암소 14만마리를 감축한다. 참여 농가에는 출하장려금 20만원을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사육 주기를 감안해 선제적 수급관리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소

사육 기간을 현행 30개월에서 24~26개월령까지 단축해 생산비도 낮춘다는 계획이다.

정황근 장관은 "농협 중심의 가격인하와 소비자 가격 조사 결과 공개, 축산물 납품가격 신고제 도입 등을 통해 유통경로 간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축산물 온라인 판매 활성화와 부분육 경매 도입 등 유통구조 개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자재·농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가중되고 있는 농가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직불금과 재해보험 등 안정망을 강화한다.

비료가격 상승에 대응해 올해 2700억원을 지원하고, 1조원 규모의 사료 구매 자금도 저리로 지원한다. 1조원 정책자금 상환을 1년 동안 유예해 이자 부담도 덜 계획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설농가의 난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예비비 151억원을 확보했다. 농업용 전기료의 인상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전작물직불제 도입 등을 통해 밭살 재배면적을 줄이는 대신 밀·콩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생산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논에 밭살 대신 가루쌀·밀·콩·조사료를 재배할 경우 1ha당 50만~430만원을 지급한다.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로드맵도 3월 중 수립한다.

국제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민간기업이 해외 곡물 유통망을 확충할 수 있도록 50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유사시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의 국내 반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근거가 되는 해외농업산림법 개정도 연내 추진한다.

반려동물 복지 수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소유자의 돌봄 의무를 강화하고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센터 11개소를 확충한다.

반려동물 수입·판매·장묘업의 허가제 전환을 추진하고,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한우 가격 폭락과 관련 "가격은 폭락한 반면 생산비의 40%를 차지하는 사료 가격은 폭등해서 한우농가가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가격 폭락 원인에 대해선 "2010년 276만마리였던 한우 사육 두수가 2023년 358만 마리로 역대 최대로 늘어나는 동안 농식품부는 적정 사육 두수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축산시장에도 쌀과 같은 시장격리제도 도입과 사료 자금을 제고 방안 마련 등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